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청년 고용현안, 지역 빈일자리 대응방향 논의

-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최근 고용동향 점검, 청년 고용현안 논의
-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원 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8.10(목)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① 7월 고용동향 : 7월에도 고용률·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으로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작년 기저효과 및 제조·건설 고용둔화 지속, 이례적인 기상여건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21.1만명)은 감소하였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② 청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은 20대 후반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이나,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5.5만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정부는 재학 청년 대상 일경험 기회제공,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강화, 청년 쉬었음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등 청년층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지역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 지역 고용과 빈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원인이 상이한 상황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차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면서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대응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하반기 일자리 상황 점검 및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담당자	서기관	이민진 (044-202-7214)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월 고용동향 >

□ 어제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63.2%, 2.7%로
7월 기준 역대 최고('82.7월 이후)·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1만명 증가하며 29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감소했습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7)82.6 ... ('23.4)35.4 (5)35.1 (6)33.3 (7)21.1

○ 이는 작년 7월 기저효과(+82.6만명) 및
올해 수출,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의 취업자수 감소와 함께,
기상악화, 집중호우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합니다.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2.7)17.6... ('23.4)△9.7 (5)△3.9 (6)△1.0 (7)△3.5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2.7)1.6... ('23.4)△3.1 (5)△6.6 (6)△6.2 (7)△4.3
도소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2.7)△1.0... ('23.4)△6.2 (5)△3.1 (6)△2.7 (7)△5.5

○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석유제품 등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건설수주 및 주택착공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편,
무인화·자동화가 가속화한 영향 등으로 인해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 수출 증감률(전년비, %): ('22.7)8.6... ('23.4)△14.4 (5)△15.4 (6)△6.0 (7)△16.5

* 주택건설 착공실적 증감(전년비, %): ('22.7)△16.9... ('23.4)△60.4 (5)△66.0 (6)△62.4

○ 특히 경활조사 대상기간인 7.9일부터 7.15일 동안
전국 주요지역 강수일이 평균 6.6일,
강수량은 작년 동일기간의 4배 가까이 증가하여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사주간 강수일·강수량('22.7월 → '23.7월): <강수일(일)> 4.1 → 6.6 <강수량(mm)> 8.7 → 33.3

** 임시직 증감(전년비, 만명): ('22.7)△5.2 ... ('23.4)△10.0 (5)△15.8 (6)△13.3 (7)△14.4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22.7)△7.7 ... ('23.4)△7.6 (5)△13.3 (6)△11.5 (7)△18.8

- 향후 고용은 건설업 경기부진의 영향이 한동안 이어지고, 8월의 태풍·폭염 등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오늘 회의에서는 7월 고용동향 및 상반기 청년 고용동향의 특징 및 정책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고용 및 지역 빈일자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청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

- 7월 청년 고용률은 47.0%로 7월 기준 역대 3위이고,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 상승 중이나,
 - 작년 7월 기저효과(+9.2만명) 및 인구감소(△17.0만명) 등으로 인해 취업자수는 △13.8만명 감소하였습니다.
 - * 청년 고용률(%): ('19.7)44.1... ('21.7)45.5... ('22.7)47.7... ('23.4)46.0 (5)47.6 (6)47.0 (7)47.0
 -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18.4... ('22.7)9.2... ('23.4)△13.7 (5)△9.9 (6)△11.7 (7)△13.8
- '23년 상반기 청년 취업자 수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인구감소('23.上 △18.2만명) 등으로 감소세(△10.3만명)이나, 고용률과 실업률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 * '23.上 청년 고용률(46.4%) 역대('80.上~) 3위, 실업률(6.4%) 및 확장실업률(17.3%) 역대('99.下~) 최저
-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① 우선, 연령별로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이며,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5.5만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② 업종별로는 무인화 등 산업·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도소매업(△9.4만명)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③ 한편, '21~'22년 고용회복에 따라 감소하였던 청년 '쉬었음'은 올해들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 점검 >

-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에서는 근로자의 고령화와 함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올해 2차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고,
 -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고용부 차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 '23년 7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1만명 증가하여, 상반기의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다만,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현장 활동 등 빈틈없는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최근의 고용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고,
 - 또한, 청년들은 취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올해 '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7월)을 통해 구인난이 심각한 10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속취업지원 TF」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3만명 규모의 내국인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 외국인력의 공급 확대*와 신속한 도입**, 규제혁신·제도개선 등
현장의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23년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 11만명('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 비전문인력(E-9) 11만명 중 7.1만명(65%)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23.6월)

-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는 21.4만개('23.6월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1.9만개 감소하였으며,
지난달 대비(△1.1만개) 감소폭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역별로는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특성이 달라,
지역마다 고용상황에 차이가 있으며,
인력부족의 원인,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전환,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의 인구유입('23.6월): 2.9천명 (청년층 4.9천명)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별 고용상황과 빈일자리 현황,
그리고 타지역과 구분되는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고,

- 지역고용 활성화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된다면,

- 이는 우리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